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추정

목 차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2
1. 선행연구 결과	2
2. 규제비용 추정결과	5
1) 추정방법	5
2) 총 규제비용	8
3) 시장규제 비용	10
4) 행정조사 부담	14
5) 납세순응 비용	14
III. 시사점	15

<부 록>

1. 규제비용 추정방법	17
2. OECD 시장규제(PMR) 지수	22
참고문헌	24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08 FAX : 02-6234-5245 E-mail : ochoi@fki.or.kr

요 약

□ 규제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는 추정항목 및 추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을 정량화하여 건수보다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
- 개별 규제의 총 비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간접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정방식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규제비용의 정의 및 추정방식, 기준연도 등에 따라 시장규제 비용의 對GDP 비중이 1.2%(현대경제연구원) ~ 9.2%(삼성경제연구소)까지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새로운 추정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연구의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규제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필요

<규제비용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요약>

추정 비용	추정 기관	기준연도	對GDP 비중(%)
경제규제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06	9.2
시장규제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06	7.7
	현대경제연구원	'13	1.2**
	중소기업 옴부즈만	'08, '13	4.4('08), 2.5('13)
행정조사 부담	한국행정연구원	'05	3.04
	삼성경제연구소	'06	1.2
납세순응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06	0.3
	조세재정연구원	'11	0.8

* 경제규제 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 종속변수가 성장물이므로 시장규제 지수의 계수추정치 -0.66에 -1을 곱한 후 한국의 '13년 시장규제 지수 1.88을 곱하여 추정

□ '13년 총 규제비용은 158.3조 원, GDP의 11.1%

- 삼성경제연구소 추정방식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추정한 '13년 기준 총 규제비용은 158.3조 원으로 '13년 명목 GDP의 11.1% 수준

* 경제규제 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시장규제 비용은 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은 기존연구(한국행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결과의 GDP 비율을 '13년 GDP에 대입

- 시장규제 비용은 103.5조 원, 행정조사 부담은 43.4조 원, 납세순응 비용은 11.4조 원이며, 각각 GDP의 7.2%, 3.04%, 0.8% 수준

-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6조 원, 제조업이 49.2조 원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38.8조 원)의 규제비용이 가장 큼
- 이론상 우리나라 규제수준이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GDP의 1.6%,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7개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 2.8%, 규제 최선진국인 네덜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 3.7% 증가 가능

□ 시장규제 비용은 '06년 대비 59.2% 증가, 대GDP 비율은 0.5%p 하락

- '06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65.0조 원에서 103.5조 원으로 7년간 59.2% 증가한 반면, 대GDP 비율은 7.7%에서 7.2%로 0.5%p 하락
- 시장규제 비용의 對GDP 비율이 하락한 것은 시장규제 지수가 '03년 1.95에서 '13년 1.88로 개선되었고, 명목 GDP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
 - *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은 금액과 비율 모두 크게 증가했으나 이는 산출방식 변경과 신규 연구결과 활용에 기인하므로 증감(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규제비용 추정결과 비교('06년 vs. '13년)>

	'06년(SERI)	'13년(본회)	증감률(연평균)
시장규제 비용(조 원) (對GDP 비중, %)	65.0 (7.7)	103.5 (7.2)	59.2(6.9)
행정조사 부담(조 원) (對GDP 비중, %)	9.7 (1.2)	43.4 (3.0)	산출방식 변경 및 신규 연구결과 활용에 따른 결과이므로 비교하기 어려움
납세순응 비용(조 원) (對GDP 비중, %)	3.4 (0.3)	11.4 (0.8)	
총 규제비용(조 원) (對GDP 비중, %)	78.1 (9.2)	158.3 (11.1)	

□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

- 규제수준이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증가가 가능하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
- 특히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규제비용의 총량을 줄이려면 행정 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법제화가 시급

I 검토배경

□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정량화하여 제시할 필요

- 규제는 그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눈에 잘 띄지 않아 부처 간 경쟁과 국회의 견제가 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시행될 우려
-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현상과 규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규제비용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국민과 기업이 규제비용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우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부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공감은 규제개혁을 위한 모멘텀 형성은 물론 규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

□ 개별규제 비용을 합산하여 전체 규제비용을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존연구는 추정 항목 및 추정방식에 따라 추정결과가 크게 다름

- 규제로 인한 총비용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간접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추정방식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규제 신설·강화 시 동등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규제비용 총량제가 정착되지 않았고,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규제비용의 총합으로 전체 규제비용을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규제비용의 정의 및 추정방식, 기준연도 등에 따라 시장규제 비용의 對GDP 비중이 1.2%(현대경제연구원) ~ 9.2%(삼성경제연구소)까지 차이를 보임

□ 본 보고서는 기존연구의 추정방식을 바탕으로 '13년 기준 우리나라 규제 비용을 측정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추정방식 등에 따라 규제비용의 편차가 크므로 새로운 추정방식보다는 기존 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더 효과적
- 이에 미국 의회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은 Crain('05년)의 방법론을 채택한 삼성경제연구소 추정방식을 기초로 규제비용을 측정하고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II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1. 선행연구 결과

□ 규제비용의 정의, 추정방식 등에 따라 금액 및 GDP 비중에 큰 차이

- 우리나라 시장규제 비용에 대한 연구는 삼성경제연구소('08년)¹⁾, 현대경제연구원('14년)²⁾, 중소기업 옴브즈만('15년)³⁾ 등이 있으나 추정결과는 큰 차이
 - 추정방식, 기준연도 등에 따라 시장규제 비용의 對GDP 비중은 최소 1.2%(현대경제연구원), 최대 7.7%(삼성경제연구소)로서 그 차이가 6배가 넘음
- 행정조사 부담은 한국행정연구원('05년)⁴⁾, 납세순응 비용은 한국조세재정 연구원('94년, '13년)⁵⁾ 등이 추정한 바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행정조사 부담과 납세순응 비용에 대한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규제비용을 측정
 - 한국행정연구원은 화물운송업의 행정조사 부담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라는 점을 토대로 경제전체 행정조사 부담을 GDP의 3.04%로 추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납세협력 비용이 약 9조 8,877.9억 원('11년 기준)으로 명목 GDP의 0.80% 수준인 것으로 추정

<규제비용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

추정 비용	추정 기관	기준연도	對GDP 비중(%)
경제규제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06	9.2
시장규제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06	7.7
	현대경제연구원	'13	1.2**
	중소기업 옴부즈만	'08, '13	4.4('08), 2.5('13)
행정조사 부담	한국행정연구원	'05	3.04
	삼성경제연구소	'06	1.2
납세순응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06	0.3
	조세재정연구원	'11	0.8

* 경제규제 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 시장규제 지수의 계수추정치 -0.66에 -1을 곱한 후 한국의 '13년 시장규제 지수 1.88을 곱하여 추정

- 1) 이동원·김선빈·박준/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2008.3.18
- 2)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4-21호 : 규제와 경제성장, 2014.5.21
- 3) 중소기업 옴브즈만 보도자료, 규제비용의 선진국과의 비교, 2015.3.11
- 4)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2006.12
- 5) ① 락태원/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1994, ② 홍범교·박명호·이혜원·홍성훈·고윤성/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행정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측정 총괄 보고서, 2013.10

□ 삼성경제연구소는 **OECD 시장규제 지수⁶⁾**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을 합하여 총 경제규제 비용을 추정

- 시장규제 비용 65조 원, 행정조사 부담 9.7조 원, 납세순응 비용 3.4조 원을 합한 78.1조 원('06년 GDP의 9.2%)을 총 경제규제 비용으로 추정
 - 시장규제 비용은 시장규제 지수 1단위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06년 기준 금액 및 GDP 비율을 추정
 - 행정조사 부담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여 분석, 납세순응 비용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결과를 수정·보완하여 추정⁷⁾
- 우리나라 규제지수가 미국, 영국, 호주 등 저규제 7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2.6%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삼성경제연구소 추정방식 및 결과>

<추정방식>

- 총 경제규제 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 시장규제 비용은 PMR 지수가 1인당 규제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1인당 규제비용 부담의 대 1인당 GDP 비율을 추정한 후 이를 명목 GDP에 곱하여 산출

구분	변수	설명(출처)
종속 변수	1인당 GDP	'02년~'05년 평균(세계은행, '03년 불변 미 달러 기준)
설명 변수	시장규제 지수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 '03년(OECD)
	전기 1인당 GDP	'98~'00년 평균(세계은행, '03년 불변 미 달러 기준)
	무역개방도	GDP대비 수출입비중, '00~'04년 평균 (Penn World Tables)
	인종다양성	무작위로 두 명 선택 시 서로 다른(언어) 인종일 확률 (La Porta et al., '99년)
	정부소비지출	'00~'04년 평균(Penn World Tables)
	교육	해당연령 대학 등록비중, '00~'04년 평균(세계은행)

- 행정조사 부담은 표준비용분석 모형을 이용해 부가가치 기준 행정조사 부담을 추정한 기존연구(이종한, '06년) 결과를 기초로 사업체 수 비중과 종사자 수 비중에 기초한 추정치의 평균으로 산출⁸⁾

6) 시장규제(PMR :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 OECD가 한국을 포함한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측정하는 지표로 관련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객관적 데이터 및 기타 OECD, WTO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매 5년마다 발표

7) 한국조세연구원의 세목별·사업체 규모별 납세액 순응비용에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중을 곱한 후 합산하여 세목별 실질 순응비용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각 세목별 징수액에 곱한 후 합산함으로써 산출

- 납세순응 비용은 한국조세연구원(곽태원, '94년)의 세목별·사업체 규모별 납세순응 비용을 기초로 각 세목별 실질 순응비용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각 세목별 징수액에 곱한 후 합산하여 추정⁹⁾

<주요결과>

- 총 경제규제 비용은 78.1조 원으로 '06년 GDP의 9.2% 수준
- 시장규제 비용은 GDP의 7.7% 수준인 65조 원이며 한국의 규제가 저규제 국가군의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GDP가 2.6% 증가
- 행정조사 부담은 9.7조 원으로 GDP의 1.2% 수준
- 납세순응 비용은 총 3.4조 원으로 GDP의 0.3% 수준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규제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3년 기준 0.3%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

- 현대경제연구원¹⁰⁾은 상품시장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13년 기준 0.3% 증가할 것으로 추정

<현대경제연구소 추정방식 및 변수>

<추정방식>

-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

<이용변수>

- 1인당 GDP 증가율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규제 지수, 인구, 투자, 정부 지출, 1인당 GDP의 전기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

8) 한국행정연구원('05)의 화물운송업 행정조사 부담 추정액이 3,082억 원이므로 '05년 기준 화물운송업 사업체 수 비중(4.7%)에 기초한 추정치는 3,082억 원을 4.7%로 나눈 6.6조 원(대GDP 비율 0.8%)이고 종사자 수 비중(2.4%)에 기초한 추정치는 3,082억 원을 2.4%로 나눈 12.8조 원(대GDP 비율 1.6%)이며 삼성경제연구소는 두 추정치의 평균인 9.7조 원(대GDP 비율 1.2%)을 행정조사 부담 추정치로 제시

9) 기존연구(곽태원, '94)의 기업 규모별 납세액 대비 순응비용 비율 자료를 기업 규모별 고용비중을 적용하여 합산, 세목별 납세액 대비 실질 순응비용 비율을 산출한 후 각 세목 징수액에 곱하고 합산하여 추정

$$\circ \text{실질 순응비용 비율}_j = \sum_i (\text{납세액 대비 순응비용 비율}_i \times \text{고용비중}_i), \quad [(j = \text{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i = \text{종업원 20인 이하, 21-100인,501인 이상 기업})]$$

$$\circ \text{납세순응 비용} = \sum_j (\text{실질 순응비용 비율}_j \times \text{징수액}_j)$$

$$\circ \text{실질 순응비용 비율}_j = \sum_i (\text{납세액 대비 순응비용 비율}_i \times \text{고용비중}_i)$$

10)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4-21호 : 규제와 경제성장, 2014.5.21

변수명	변수설명	자료출처
1인당 GDP	명목 미 달러 기준	OECD
시장규제 지수	상품시장 규제지수	OECD
인구	인구성장률	OECD
ln(투자)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 비중의 자연대수 값	OECD
ln(정부지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의 자연대수 값	OECD
ln(1인당 GDP-1)	1인당 GDP 자연대수 값의 전기 변수	OECD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08년과 '13년의 시장규제 비용을 GDP 대비 4.4%, 2.5%인 48.3조 원, 36.2조 원으로 추정¹¹⁾

2. 규제비용 추정결과

1) 추정방법

□ 삼성경제연구소('08)의 규제비용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추정

- 총 규제비용을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으로 나누어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추정

- 규제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 시장규제 비용은 가격, 생산, 시장진입 등 시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변수와 행위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¹²⁾으로 규제에 의한 GDP 감소액으로 측정
 - 시장개입으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규제에 의한 기업의 투자 감소효과 등을 측정하므로 행정조사 부담 및 납세순응 비용과 중복되지 않음
 -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정부규제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보고·신고하는데 투입된 인력·시간·경비 부담
 - 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고 서류준비 및 제출비용
 - 납세순응 비용은 세금보고 등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위해 세액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
 - 예: 법인세 납부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 수취·정리 비용
- * 조세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 이외의 지출로 미국도 연방 규제비용에 포함

11) 중소기업 옴부즈만 보도자료, 규제비용의 선진국과의 비교, 2015.3

- 시장규제 비용은 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기초로 추정
 - '08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식에 기초하되 1인당 GDP증가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식은 미 의회가 업계 유일(Only Player in Town) 이라고 인정한 Crain('05년)의 연구결과¹³⁾에 기초

<시장규제 비용의 추정개요 및 주요 변수설명>

<추정 개요>

-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과약 후 시장규제가 없을 경우 추가달성 가능한 1인당 GDP 증가액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목 GDP에 곱하여 추정
 - * 회귀식 : 1인당 $GDP = c + \beta \cdot \text{시장규제 지수} + \theta_j \cdot \text{통제변수}_j + \epsilon$
 - β 는 OECD 시장규제 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1인당 GDP('05년 불변¹⁴⁾ PPP¹⁵⁾ 달러 기준)가 몇 단위 증가하는가를 측정
 - 통제변수로 1인당 GDP 증가율, 전기 1인당 GDP, 무역개방도, 인종다양성, 정부 소비지출 비중, 대학 등록 비중 변수를 포함

변수	설명(출처)
1인당 GDP	'11~'13년 평균(세계은행, '05년 불변 미 달러 기준)
1인당 GDP 증가율	'10~'13년 산술평균 1인당 GDP 증가율 (세계은행, '05년 불변 미 달러 기준)
시장규제 지수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 '13년(OECD)
전기 1인당 GDP	'10년 1인당 GDP(세계은행, '05년 불변 미 달러 기준)
무역개방도	GDP 대비 수출입 비중, '08~'10년 평균(Penn World Tables)
인종다양성	무작위로 2인 선택 시 다른 언어를 사용할 확률(La Porta et al., '99)
정부소비지출 비중	1인당 GDP(불변·구매력 미 달러 기준)에 대한 정부소비지출 비중, '08~'10년 평균(Penn World Tables)
대학등록 비중	대학교육 등록 비중, '09~'12년 평균(세계은행)

12)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 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비용

13) '08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시장규제 비용 추정을 위해 회귀식에 포함시킨 변수는 Crain('05)의 연구결과(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 Report for the Office of Advocacy, Washington: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 국내 경제규제 추정식에 기초하되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설명변수로 추가. Crain은 미국의 규제를 경제규제(국제 교역 규제, 국내 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납세순응 비용으로 구분하여 '04년 기준 미국의 총 규제비용이 미국 국민소득의 11%인 1.1조 달러인 것으로 추정

<설명변수의 1인당 GDP에 대한 예상 영향>

- 관심변수인 시장규제 지수 외에 1인당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
 - 분석대상이 주로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이므로 1인당 GDP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 전기 1인당 GDP가 클수록 1인당 GDP가 클 것으로 예상
 -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인종이 다양할수록 인종 간 지대 추구하고 공공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성장이 지체
 - 정부 소비지출 증가는 GDP 성장에 부정적 영향¹⁶⁾
 - 높은 교육수준은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GDP 증대 요인으로 작용

- 행정조사 부담은 표준비용 모형¹⁷⁾에 의한 '05년 기준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대GDP 비중이 3.04%라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의 연구를 활용하여 추정
 - 이종한은 화물운송업의 행정조사 부담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임을 기초로 경제 전체 행정조사 부담을 GDP의 3.04%로 추정
 - 행정조사 부담은 3.04에 '13년 명목 GDP(1,428.3조 원)를 곱하여 추정
- 납세순응 비용은 표준비용 모형에 의한 '11년 납세협력 비용이 명목 GDP의 0.80% 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추정치의 대GDP 비율을 '13년 GDP(1,428.3조 원)에 적용하여 산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납세협력 비용이 약 9조 8,877.9억 원('11년 기준)으로 명목 GDP의 0.80% 수준인 것으로 추정

14) 불변가격(Constant Price) 기준은 GDP 등의 변수를 특정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에 기초하여 계산하였음을 의미함

15)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 평가)의 약어로 특정국가의 지역 통화 기준 GDP 등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할 때 그 특정국가와 미국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조정한 환율로 환산하였음을 의미함

16)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예를 들어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면 그만큼 가계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금융시장에서 자금부족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됨.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투자가 감소됨. 즉, 정부지출 확대 → 이자율 상승 → 민간 투자 위축 → 총수요 위축현상이 나타나게 됨. 고전학파는 완전한 구축효과로 인해 확장 재정정책이 소용없다고 주장한 반면, 케인즈 학파는 불완전한 구축효과로 인해 재정정책이 유용하다고 주장

17) SCM(Standard Cost Model)은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정부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행정조사 부담을 행정수행 시간, 시간당 임금, 연간 보고빈도, 모집단 수를 감안하여 추정. 정보의무 분석 → 수량변수 확인 → 표본조사 → 결과집계 → 행정조사 부담 추정의 단계를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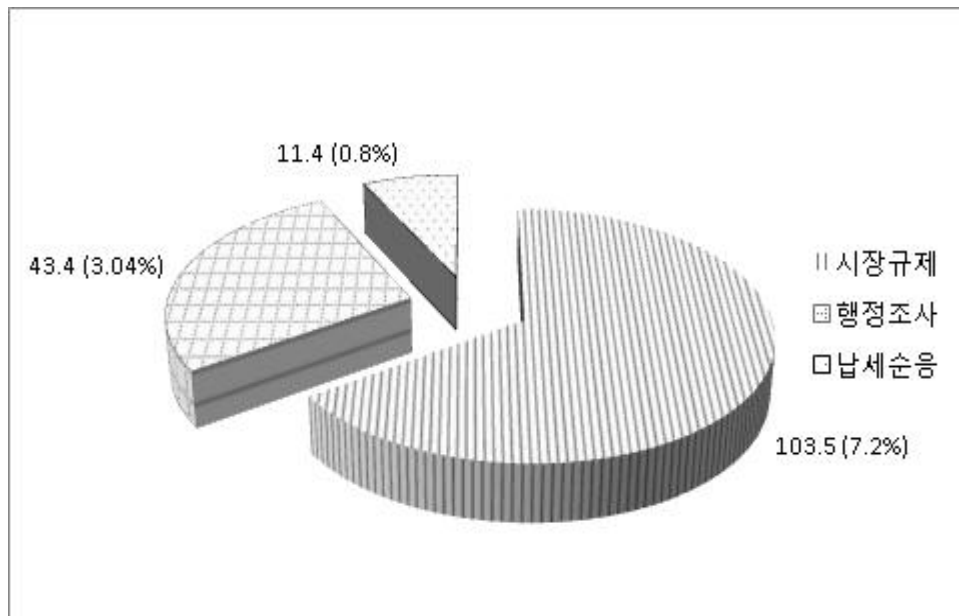
2) 총 규제비용

□ '13년 기준 총 규제비용은 158.3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1% 수준

- 구성항목별로는 시장규제 비용 103.5조 원, 행정조사 부담 43.4조 원, 납세순응 비용 11.4조 원
- 대GDP 비율은 시장규제 비용 7.2%, 행정조사 부담 3.04%, 납세순응 비용 0.8%

<'13년 구성요소별 규제비용>

(단위 : 조 원, %)



주 : ()안은 '13년 명목 GDP 대비 비율

□ 기업당 4,306만 원, 가구당 870만 원, 국민 1인당 315만 원의 규제비용 부담

- 158.3조 원을 경제주체별로 배분하면 기업체당 4,306만 원, 근로자당 826만 원, 가구당 870만 원, 국민 1인당 315만 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

<경제주체당 규제비용 부담>

(단위 : 만 원, 개(명) %)

구분	총규제비용 (A)	'13년 경제주체 수 (B)		경제주체당 규제비용 (A/B)
기업	15,834,077,200	사업체 수*	3,676,876	4,306
근로자		근로자 수*	19,173,474	826
가구		가구 수	18,206,328	870
국민		인구	50,219,669	315

자료 :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가구 및 인구 수는 통계청 장래가구 및 인구추계 통계를 이용

□ 산업부문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93.6조 원, 제조업이 49.2조 원

- 총 규제비용에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곱하여 추정한 산업별 규제비용은 서비스업이 전체의 59.1%인 93.6조 원이고 제조업은 전체의 31.1%인 49.2조 원¹⁸⁾
- 서비스업 세부 부문별 규제비용은 지식 서비스업¹⁹⁾ 38.8조 원, 유통서비스업²⁰⁾ 19.8조 원, 개인서비스업²¹⁾ 19.3조 원의 순
- 제조업 분야별 규제비용 크기는 중간재²²⁾ 18.2조, 자본재²³⁾ 14.9조, IT부품²⁴⁾ 8.2조 원의 순

<주요 산업별 규제비용 추정>

(단위 : 조 원, %)

구분	'13년		
	금액(조 원)	비중(%)	
전산업	158.3	100.0	
농림어업	3.6	2.3	
광업	0.3	0.2	
제조업	49.2	31.1	
	자본재	14.9	9.4
	소비재	4.4	2.8
	IT제품	3.3	2.1
	IT부품	8.2	5.2
	중간재	18.2	11.5
전기·가스·수도	2.7	1.7	
폐수처리·자원재활용	1.0	0.6	
건설업	7.9	5.0	
서비스업	93.6	59.1	
	유통서비스	19.8	12.5
	지식서비스	38.8	24.5
	사회서비스	15.7	9.9
	개인서비스	19.3	12.2

주 : 산업분류 및 부가가치 비중은 산업연구원 발표 주요산업동향지표(2014.12)에 의한 구분임

18) 산업별 규제비용 크기는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19) 방송, 통신, 정보, 출판,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교육, 의료·보건, 예술·스포츠·여가 산업 등

20) 도·소매업과 운수·보관업 등

21)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등

22)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 의약, 섬유, 고무, 플라스틱, 석유정제, 제지, 목재, 세라믹, 시멘트 유리, 기타 비금속광물 등

23) 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기타 수송장비, 기계 및 기기 등

24)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 기타 전자부품 등

3) 시장규제 비용

□ 시장규제 지수가 1단위 감소하면 1인당 GDP는 901.3달러 증가

- 설명변수 중 시장규제 지수와 1인당 GDP 증가율, 전기 1인당 GDP, 대학교육 등록 비중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계수 추정치를 나타냄
 - 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어 성장을 저해하며 1인당 GDP 증가율과 전기 1인당 GDP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을 촉진
 - 무역개방도, 인종다양성, 정부 소비지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시장규제 지수의 계수 추정치는 -901.304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규제 지수 1단위 감소 시 1인당 GDP가 901.3달러 증가함을 의미
 - 시장규제 지수 1단위 감소는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가 1.88에서 0.88로 낮아져 규제 최선진국인 네덜란드('13년 시장규제 지수 0.92) 수준보다도 개선됨을 의미

<시장규제 비용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1인당 GDP에 대한 영향
시장규제 지수	-901.304*
1인당 GDP 증가율	437.861**
전기 1인당 GDP	1.0107**
무역개방도	-276.014
인종다양성	-140.790
정부 소비지출 비중	10610.41
대학교육 등록 비중	1329.220*
관측치 수	31
조정 결정계수 ²⁵⁾	0.9993

- 주 : 1. **는 1%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의미
 2. 시장규제 지수의 내생성 문제²⁶⁾를 제어하기 위해 '08년 시장규제 지수를 '13년 시장규제 지수의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활용
 3. 이분산(heteroscedasticity) 검정결과(White test) 이분산 문제는 없었음(P-value:0.4110)

25) 추정된 선형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결정계수가 포함된 설명변수의 수를 감안하여 조정된 값

$$\bar{R}^2 = R^2 - (1 - R^2) \frac{n-1}{n-p-1} \quad (n \text{은 관측치 수, } p \text{는 절편항을 제외한 설명변수의 수)에 의해 계산함}$$

26)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회귀법(Two 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을 이용함

□ 시장규제 비용은 **GDP의 7.2%인 103.5조 원으로 추정**

- 시장규제 지수 1단위 감소 시 1인당 GDP 증가액 901.3 달러에 한국의 '13년 시장규제 지수 1.878을 곱하여 얻은 1인당 시장규제 비용은 1인당 GDP의 7.2%인 1,692.6달러로 추정
 - 대GDP 비율은 1인당 시장규제 비용 1,692.6 달러를 '11년~'13년 평균 1인당 GDP 23,359.8 달러로 나누어서 구함
- 1인당 시장규제 비용의 대GDP 비율 7.2%를 '13년 명목 GDP에 곱한 원화 기준 시장규제 비용은 103.5조 원으로 추정

<시장규제 비용의 계산과정>

한국 시장 규제 지수 (A)	시장규제 지수의 영향추정치 (B)	1인당 규제비용 (C)	규제비용의 대 1인당 GDP 비율 (D)	원화 기준 시장규제 비용 (E)
-	-	$A \times (-1) \times B$	$C \div 1인당 GDP^1 \times 100$	$D \div 100 \times GDP^2$
1.878	-901.3	1,692.6	7.246%	103.5조 원

주 : 1. 1인당 GDP는 '11~'13년 평균 1인당 GDP(23,359.8달러)
 2. GDP는 '13년 명목 GDP(1,428.3조 원)

- '06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와 비교하면 금액은 59.2% 증가, 대GDP 비율은 0.5%p 감소
 - 시장규제 비용은 '06년 65.0조 원에서 '13년 103.5조 원으로 59.2% 증가하였고 대GDP 비율은 '06년 7.7%에서 '13년 7.2%로 0.5%p 하락
 - 대GDP 비율 하락은 '13년 시장규제 지수가 '03년에 비해 개선²⁷⁾됐고 명목 GDP가 증가했기 때문

□ 시장규제 지수는 **OECD 31개국 중 4위, 시장규제 비용의 대GDP 비율은 10위**

- '13년 시장규제 강도는 한국이 네 번째로 강하며 국별 시장규제 비용의 대GDP 비율은 한국이 10위를 기록

27) 그러나 한국의 OECD 시장규제 지수의 개선속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느려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필요성 제기. 한국의 '13년 시장규제 지수는 1.88로 '03년 시장규제 지수 1.95에 비해 3.9% 감소한 반면, 분석에 포함된 OECD 31개국의 시장규제 지수 평균은 '03년 1.77에서 '13년 1.46으로 17.5% 감소

<OECD 시장규제 지수 변화율>

(단위 : %)

구분	'03년 시장규제 지수	'13년 시장규제 지수	'13년 감소율	비고
OECD 31개국 평균	1.765	1.456	17.5	규제개선
한국	1.953	1.878	3.9	규제개선

자료 : OECD

- 추정에 포함된 OECD 31개국의 대GDP 비율 평균은 6.2%로 터키, 멕시코, 칠레의 순으로 높고,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순으로 낮음

<OECD 국가별 시장규제 비용의 대GDP 비율 비교>

(단위: 미 달러, %, 순위)

국가	1인당 GDP ('11-'13년 평균)	시장규제 지수('13년)	1인당 규제비용		
			금액	대1인당 GDP비율	비율 순위
Turkey	8,539.9	2.460	2,217.2	25.96	1
Mexico	8,453.0	1.906	1,718.1	20.33	2
Chile	9,396.2	1.514	1,364.8	14.52	3
Poland	10,601.8	1.648	1,485.3	14.01	4
Hungary	11,334.5	1.327	1,196.2	10.55	5
Estonia	11,684.8	1.292	1,164.2	9.96	6
Czech Republic	14,763.5	1.395	1,257.3	8.52	7
Greece	18,990.8	1.742	1,569.9	8.27	8
Israel	24,037.5	2.149	1,937.2	8.06	9
Korea	23,359.8	1.878	1,692.6	7.246	10
Portugal	18,496.8	1.295	1,167.0	6.31	11
Spain	25,485.7	1.442	1,299.6	5.10	12
New Zealand	28,657.3	1.260	1,135.9	3.96	13
Italy	30,152.3	1.263	1,138.4	3.78	14
France	35,700.3	1.468	1,323.1	3.71	15
Japan	36,896.3	1.412	1,272.5	3.45	16
Belgium	37,720.5	1.386	1,248.9	3.31	17
Australia	37,072.8	1.290	1,162.6	3.14	18
Sweden	45,525.0	1.519	1,369.5	3.01	19
Germany	38,987.5	1.294	1,166.2	2.99	20
Finland	39,788.6	1.293	1,165.8	2.93	21
Ireland	47,368.0	1.454	1,310.7	2.77	22
Austria	41,244.4	1.192	1,074.1	2.60	23
United Kingdom	39,945.4	1.081	974.0	2.44	24
Iceland	58,036.3	1.497	1,349.5	2.33	25
Denmark	47,674.2	1.225	1,104.1	2.32	26
Switzerland	58,716.1	1.500	1,351.7	2.30	27
United States	45,030.1	1.110	1,000.9	2.22	28
Norway	65,139.2	1.462	1,318.0	2.02	29
Netherlands	43,474.1	0.915	824.7	1.90	30
Luxembourg	80,388.6	1.458	1,314.4	1.64	31
31개국 평균	33,634.2	1.456	1,314.1	6.18	-

주 : 미국의 시장규제 지수의 경우 '13년 자료 미발표로 '08년 자료를 이용

자료: 1인당 GDP는 세계은행, 시장규제 지수는 OECD, 1인당 규제비용은 본회 시산

□ OECD 평균으로 규제개선 시 GDP 1.6% 증가, 일자리 29.9만 개 창출

- 한국의 시장규제(1.878)가 규제선진 7개국²⁸⁾ 수준(1.149)으로 개선되면 2.8%, OECD 31국 평균수준(1.456)으로 개선되면 1.6%의 GDP 추가 상승효과 가능

<규제수준 개선 시 효과>

구분	한국의 시장 규제지수(A)	비교 시장 규제 지수(B)	규제 지수 차이(C)	1인당 시장 규제 비용(D)	GDP 증가 효과
산식	-	-	A - B	901.3 × C	D / 1인당 GDP
규제가 없을 경우	1.878	0.000	1.878	1,692.6달러	7.2%
시장규제 지수 1단위 개선		0.878	1.000	901.3달러	3.9%
규제 최선진국 수준		0.915	0.963	867.9달러	3.7%
선진 7개국 수준		1.149	0.729	656.6달러	2.8%
OECD 평균 수준		1.456	0.450	406.0달러	1.6%

- 규제개선 시나리오별 GDP 증가액에 최종수요에 대한 취업유발 계수를 곱하면 규제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가능
 - 규제선진 7개국 수준 개선 시 51.6만 명, OECD 31국 평균수준 개선 시 29.9만 명

<시장규제 개선 시 일자리 창출효과>

(단위 : %, 10억 원, 만 명)

시나리오(시장규제 지수)	추가 GDP 증가율	GDP 증가액	고용유발	취업유발
규제가 없을 경우(0.00)	7.2	103,494.3	90.5	133.1
시장규제 지수 1단위 개선(0.88)	3.9	55,108.8	48.2	70.9
규제 최선진국 수준(0.92)	3.7	53,068.0	46.4	68.3
규제선진 7국 수준(1.15)	2.8	40,148.5	35.1	51.6
OECD 평균수준(1.46)	1.6	23,268.8	20.3	29.9

주: 1. 추가 GDP 증가율은 시나리오별 시장규제 지수 개선치(1.88 - 시나리오별 시장규제 지수)에 901.3달러(시장규제 지수 1단위 감소 시 1인당 GDP 증가액)를 곱한 후 1인당 GDP로 나눈 비율
 2. GDP 증가액은 '추가 GDP 증가율'에 '13년 명목 GDP 1,428.3조 원을 곱하여 산출
 3.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는 '10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최종수요 10억 원에 대한 고용유발계수(8.745)와 취업유발계수(12.861)를 GDP 증가액에 곱하여 산출

28)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이태리의 7개국을 말함

4) 행정조사 부담

□ 행정조사 부담은 명목 GDP의 3.04% 수준인 43.4조 원

- 기존 연구결과²⁹⁾는 '05년 기준 화물운송업의 행정조사 부담액 3,082억 원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인 것으로 추정
 - 행정조사 부담은 규제순응을 위한 시간비용을 표준비용 모형에 의해 측정
- 3.04%를 '13년 명목 GDP(1428.3조 원)에 곱한 43.4조 원을 행정조사 부담으로 추정
- '06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9.7조 원에서 43.4조 원, 대GDP 비율은 1.2%에서 3.04%로 증가하였으나 추정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무의미함
 - '13년 추정은 화물운송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이용한 반면, '06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은 화물운송업의 종업원 수 비중과 사업체 수 비중의 산술평균을 이용

5) 납세순응 비용

□ '13년 납세순응 비용은 11.4조 원, 대GDP 비율은 0.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³⁰⁾은 OECD에서 권장하는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이용하여 '11년 기준 한국의 납세순응 비용이 GDP의 0.8%(9조 8,877.9억 원)인 것으로 추정
- 0.8%를 '13년 GDP(1428.3조 원)에 곱한 11.4조 원을 납세순응 비용으로 추정
- '06년 삼성경제연구소 결과와 비교하면 금액은 3.4조 원에서 11.4조 원, 대GDP 비율은 0.3%에서 0.8%로 증가했으나 신규 연구결과를 활용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움
 - '13년 추정은 '11년 기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GDP 납세순응 비용 비율을 이용한 반면, '06년 추정은 기존연구(곽태원, '94년)의 기업 규모별 납세순응 비용 비율에 고용비중을 적용한 실질 납세순응 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

29)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2006.12

30) 홍범교·박명호·이혜원·홍성훈·고윤성/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측정 총괄 보고서, 2013.10

Ⅲ 시사점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절실

- '15년 1/4분기 실질 성장률이 2.4%에 그치는 등 경제가 활력을 잃은 가운데 '13년 총 규제비용이 GDP의 11.1%에 달하고 있는 실정
 - 총 규제비용 158.3조 원은 '13년 법인세 43.9조 원의 3.6배 수준으로 근로소득세 22.5조 원의 7.0배를 넘어서는 규모

<규제비용과 주요 세수 비교>

(단위 : 조 원)

구분	'13년 총 규제비용	'13년 법인세	'13년 근로소득세
금액	158.3	43.9	22.5

자료 : 통계청 재정통계

- 규제비용이 큰 것은 그간 핵심규제의 개혁이 미흡한데다 오히려 경제 민주화 논의 속에 파급력이 큰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된 때문으로 판단됨
 - 파급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 서비스업 규제 등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
 -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규모 유통업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신설됨

□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

- 시장규제가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규제수준이 개선되면 추가적인 GDP 상승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량적으로 증명됨
- 고용노동부의 '1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규제완화가 재정투입 보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훨씬 더 효과적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상위 6대 정책 중 예산투입이 없는 규제개선분야의 정책이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비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큼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단위: 명)

구분	순위	규제개선 분야	창조경제 분야 (예산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정책명 (일자리 창출)	1	장시간 근로개선 (14~15만)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35)
	2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1.3~2.4만)	환경기술 R&D 투자 확대 (28)
	3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0.5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지원 (25)
계		15.8~17.9만	88

주: 고용노동부 '14년 고용영향평가 보도자료('15.4.13)를 재편집

- 따라서 우리 경제가 3%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시사
 - 특히 수도권 규제, 대형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시급히 개혁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규제를 개선할 필요

□ 규제비용 총량제의 법제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 시급

- 정권의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법제화가 시급
 - 규제비용 총량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토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개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규제비용 감축에도 효과적
 -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음
- 규제비용 총량제가 법제화되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의 파급 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규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규제 비용이 큰 핵심규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규제도입 시에는 핵심 덩어리 규제, 감축 시에는 비핵심규제가 주를 이루는 기존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 관행을 탈피하여 핵심규제 위주 규제개혁 가능성 제고

<부 록>

1. 규제비용 추정방법

1) 개요

□ 삼성경제연구소('08)의 규제비용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 시장규제 비용,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으로 나누어 추산

<규제비용의 정의>

규제비용 = 시장규제 비용 + 행정조사 부담 + 납세순응 비용

- 시장규제 비용은 가격, 생산, 시장진입 등 시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변수와 행위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데 따른 기회비용³¹⁾으로 규제에 의한 GDP 감소액으로 측정
 - 시장개입으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규제에 의한 기업의 투자 감소효과 등을 측정하므로 행정조사 부담 및 납세순응 비용과 중복되지 않음
 - 행정조사 부담은 기업이 정부규제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보고·신고하는데 투입된 인력·시간·경비 부담
 - 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고 서류준비 및 제출비용
 - 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보고 등 세금납부를 위해 세액 외에 추가 지출하는 비용
 - 예: 법인세 납부를 위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 수취·정리 비용
- * 조세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니나 납세순응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 이외의 지출로 미국도 연방 규제비용에 포함

- 시장규제 비용은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하고 OECD 시장규제(PMR :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추정
 -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분석('08년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이용한 자료와 추정 방식을 따르되, 설명변수에 1인당 GDP 증가율을 추가
- 행정조사 부담은 화물운송업의 행정조사 부담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라는 '06년 연구결과(이종한)를 활용, '13년 명목 GDP의 3.04%로 추정
- 납세순응 비용³²⁾은 납세협력 비용의 대 명목 GDP 비율이 0.8%라는 기존 연구('13년 조세재정연구원)결과를 활용, '13년 명목 GDP의 0.8%로 추정

31)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 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비용

32)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비용을 말함

2) 구성요인별 추산방법

(1) 시장규제 비용

□ OECD의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³³⁾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

- '08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식³⁴⁾에 기초하였으나 1인당 GDP 증가율을 설명 변수로 추가하고 '08년 시장규제 지수를 '13년 시장규제 지수의 도구변수로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을 활용
- '13년 회귀식은 1인당 $GDP = c + \beta \cdot \text{시장규제 지수} + \theta_j \cdot \text{통제변수}_j + \epsilon$

<'13년 본회 회귀식과 '08년 삼성경제연구소 회귀식 비교>

구분	'13년 본회 추정	'08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
추정방법	2단계 최소자승법	최소자승법
종속변수	1인당 GDP	1인당 GDP
설명변수	시장규제 지수	시장규제 지수
	1인당 GDP 증가율	-
	전기 1인당 GDP	전기 1인당 GDP
	무역개방도	무역개방도
	인종다양성	인종다양성
	정부소비 지출	정부소비지출
	대학 등록비중	교육

주 : 1인당 GDP의 경우 '13년 추정치는 '05년 PPP 불변 달러 기준, '08년 추정치는 '03년 PPP 불변 달러 기준

□ 시장규제 비용은 시장규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

-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요인이 제거되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GDP와 규제가 있는 현실 세계 GDP 사이의 소득 격차를 의미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두 세계 사이에 소득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 규제가 경쟁을 제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중국적으로 GDP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

3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형 관계식을 구하는 계량 분석기법

34) '08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 회귀식에 포함시킨 변수는 Crain('05)의 연구결과("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Report for the Office of Advocacy. Washington: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기초하되 정부소비지출 비중을 설명변수로 추가

□ 원화 기준 시장규제 비용은 원화 기준 GDP에 1인당 시장규제 비용(달러 기준)의 대 1인당 GDP(달러 기준) 비율을 곱하여 추정

- 1인당 규제비용(달러 기준)의 대 1인당 GDP(달러 기준) 비율은 $[\beta \times (-1) \times \text{시장규제 지수}] / 1\text{인당 GDP(달러 기준)} \times 100$ 임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각각 1인당 GDP 및 시장규제 지수이므로 계수 추정치는 시장규제 지수 1단위 증가 시 1인당 GDP가 몇 단위 변화하는가를 측정
 - 1인당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전혀 없을 경우(시장규제 지수 = 0)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액을 의미

<시장규제 비용의 추산 과정>

- 시장규제 지수 계수 추정치(β)의 특성 : 시장규제 지수 한 단위 증가 시 1인당 GDP('05년 PPP 불변 미 달러 기준) 변화금액을 측정
- 명목 원화 기준 시장규제 비용 추산 : 명목 GDP(원화 기준) $\times [(\beta \times (-1) \times \text{시장규제 지수}) / 1\text{인당 GDP('05년 PPP 불변 미 달러 기준)}]$

(2) 행정조사 부담

□ 화물운송업의 행정비용 부담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추산

- 행정조사 부담은 '05년 기준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대GDP 비중이 3.04%라는 한국행정연구원 이종한의 연구를 활용하여 추정
 - 이종한은 화물운송업의 행정조사 부담이 화물운송업 부가가치의 3.04%임을 기초로 경제 전체 행정조사 부담을 GDP의 3.04%로 추정
 - 3.04%를 '13년 GDP(1,428.3조 원)에 곱한 43.4조 원을 행정조사 부담으로 추정
-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정조사 부담은 정부규제로 인한 행정조사에 순응하기 위해 민간이 부담하게 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표준비용 모형(SCM : Standard Cost Model)에 의해 추정됨
 - 표준비용모형은 1994년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이후 EU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기간에 걸쳐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에 순응하기 위해 유발되는 시간비용을 측정
 - 행정조사 부담 = 행정수행 시간 \times 시간당 임금 \times 연간 보고빈도 \times 모집단 수

<표준비용 모형 : Standard Cost Model>

- 특정기간 동안 정부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제공 의무를 기업이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정적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됨
- 행정조사 부담 = 행정수행 시간 × 시간당 임금 × 연간 보고빈도 × 모집단 수

행정조사 부담의 측정단계 요약

연번	절차	주요내용
1	정보의무 분석	규제목록 작성 및 정보의무 자료요구 분류
	↓	
2	수량변수 확인	연간 횟수, 모집단, 빈도 수 확인
	↓	
3	표본조사	조상방법, 설문조사 설계 및 조사대상 기업 선정, 조사 실시
	↓	
4	결과집계	자료 검증 및 표준화, 응답기업에 대한 행정비용 부담 집계
	↓	
5	행정조사 부담 추정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비중을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행정조사 부담 추정

자료: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09)에서 인용하여 재편집

<표준비용의 세부 분석단계>

국면 0(시작) : 분석에 포함된 기업관련 규제를 사전적 분석 시작 전에 구분함. 대규모 분석의 경우 시작 모임에 해당부처, 컨설턴트와 관련 당사자 참석

국면 1(사전적 분석)

- Step 1: 규제의 내용을 정보제공 의무와 자료 요구로 분해. 정보 제공의무를 자료요구로 분류하고 관련된 행정적 활동을 식별. 해당부처는 규제를 국가적·국제적 요소로 분류
- Step 2: 관계된 규제를 구분하고 경계설정
- Step 3: 정보 제공의무를 유형에 따라 분류
- Step 4: 관련된 기업부분을 식별
- Step 5: 모집단, 비율 및 빈도수를 식별
- Step 6: 기업 인터뷰에 따라 평가된 정보 제공의무와 전문가 평가에 의하여 후에 국면 3(step 14)에서 추정되는 시간 소비에 대해 설명
- Step 7: 관련 비용 변수의 식별
- Step 8: 인터뷰에 사용할 지침서 준비
- Step 9: steps 1-8에 대한 전문가의 리뷰 실행

국면 2. 기업의 시간 소비와 비용에 대한 분석

- Step 10: 인터뷰를 위해 선택된 규제의 대상 그룹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선정
- Step 11: 기업 인터뷰
- Step 12: 기업분야 시간 및 자원 소비 표준화
- Step 13: steps 10-12에 대한 전문가의 리뷰 실행

국면 3. 평가와 보고

Step 14: 인증된 데이터를 국가 수준에서 추정

Step 15: 결과를 보고하고,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에 산입

자료 :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06.12)

(3) 납세순응 비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GDP의 0.8%로 추정

-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측정 총괄 보고서³⁵⁾는 '11년 기준 한국의 납세 순응 비용³⁶⁾이 GDP의 0.8%(9조 8,877.9억 원)인 것으로 추정
 - 납세순응 비용 또한 OECD가 권장하는 표준비용 모형(Standard Cost Model)에 의해 측정
 - 세목별 납세순응 비용³⁷⁾을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순응 비용이 28.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법인세 26.8%, 소득세 24.2% 등의 순
- 0.8%를 '13년 명목GDP(1428.3조 원)에 곱하여 납세순응 비용을 추정

35) 홍범교·박명호·이혜원·홍성훈·고윤성/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측정 총괄 보고서, 2013.10

36)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추정한 납세순응 비용은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국세행정에 협력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측정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심리적 비용은 심리적 부담을 관찰하기 어렵고 수치로 측정하기 힘들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 둘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 그로 인해 야기된 비용 중 세법이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비용만을 포함. 셋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납세협력 비용과 상쇄하지 않고 총 비용을 측정. 넷째, 세법의 규정 중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측정 결과에서 배제(예: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의무, 사업양도 신고서 등 제출 의무, 비 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의무 등)

37) 전체 납세순응 비용의 세목별 분포

(단위 : 억 원, %)

세목	납세순응 비용	
	금액	비중
공 통	2,577.3	2.6
법 인 세	26,494.1	26.8
소 득 세	23,920.0	24.2
부가가치세	27,643.9	28.0
원 천 세	10,457.1	10.6
근로소득세(연말정산)	3,051.9	3.1
양도소득세	2,958.5	3.0
상 속 세	247.1	0.2
증 여 세	4722.5	0.7
공익 법인	227.9	0.2
근로장려금	65.2	0.1
기 타	512.4	0.6
합 계	98,877.9	100.0

주 1 : 규정된 사항 외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 등과 같이 근거법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위치하여 소관은 부가가치세과이나 다른 세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공통으로 분류

2 :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관련 소득세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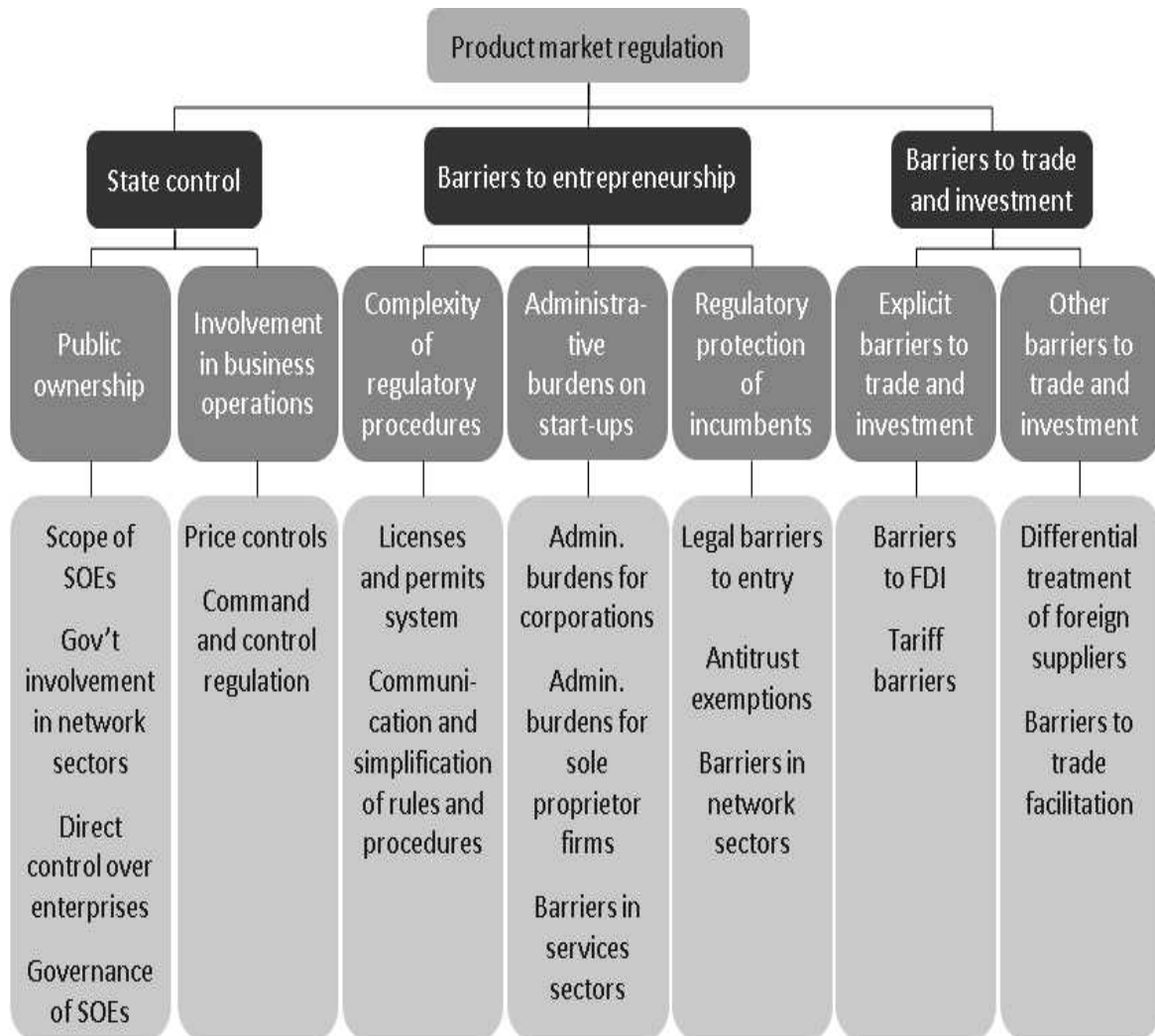
3 : 기타에는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및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등과 관련 정보 제공 의무들의 납세협력 비용이 포함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측정 총괄 보고서, '13.10)

2. OECD 시장규제(PMR) 지수

□ OECD에서 34개 회원국 중심으로 국별 경제전반의 규제와 시장환경을 측정하는 지표

-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규제관행 관련 지식을 함양하고 각국의 규제 수준과 시간에 걸친 규제개혁의 진척을 계량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작성
 - 0에서 6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규제수준이 강함을 의미
 - 세부규제 항목을 합산하여 국가통제(State control), 기업가 정신 저해(Barriers to entrepreneurship), 거래 및 투자장벽(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의 3개 항목 지수를 작성한 후 이를 취합하여 산출



- 34개 회원국과 2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98년, '03년, '08년, '13년 등 5년 주기로 발표
 - 회원국은 정부, 비회원국은 정부 또는 지역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OECD 주요국별 시장규제 지수 추이>

구분	'98	'03	'08	'13
Australia	1.721	1.338	1.463	1.290
Austria	2.123	1.608	1.373	1.192
Belgium	2.296	1.636	1.520	1.386
Chile	-	-	1.748	1.514
Czech Republic	2.639	1.875	1.498	1.395
Denmark	1.662	1.478	1.351	1.225
Estonia	-	-	1.370	1.292
Finland	1.935	1.494	1.343	1.293
France	2.377	1.775	1.517	1.468
Germany	2.225	1.801	1.412	1.294
Greece	2.751	2.507	2.214	1.742
Hungary	2.664	2.112	1.539	1.327
Iceland	2.034	1.618	1.482	1.497
Ireland	1.857	1.583	1.350	1.454
Israel	-	-	2.228	2.149
Italy	2.359	1.804	1.488	1.263
Japan	2.113	1.367	1.431	1.412
Korea	2.558	1.953	1.943	1.878
Luxembourg	-	1.598	1.437	1.458
Mexico	2.760	2.504	2.051	1.906
Netherlands	1.816	1.487	0.962	0.915
New Zealand	1.448	1.286	1.228	1.260
Norway	1.869	1.556	1.538	1.462
Poland	3.190	2.423	2.044	1.648
Portugal	2.589	2.123	1.692	1.295
Spain	2.391	1.793	1.595	1.442
Sweden	1.889	1.504	1.606	1.519
Switzerland	2.487	1.992	1.547	1.500
Turkey	3.282	2.823	2.651	2.460
United Kingdom	1.319	1.095	1.205	1.081
United States	1.501	1.304	1.110	-
31개국 평균	2.217	1.766	1.579	1.456*

주* : 미국의 '13년 시장규제 지수가 '08년과 같다는 가정 아래 계산
 자료 :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MR>('15.4.16 방문)

참고문헌

- 한국은행, 201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15.4.23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발표(보도자료), 2015.4.13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2014.12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4-21호 : 규제와 경제성장, 2014.5.21.
- 박명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현안분석1 : 규제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시사점 - 국세행정의 표준비용모형 운용 경험을 중심으로, 2014.4
- 홍범교·박명호·이혜원·홍성훈·고윤성/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 비용측정 총괄 보고서, 2013.10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2009
- 이동원·김선빈·박준/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2008.3.18
-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2006.12
- 중소기업 옴부즈만 보도자료, 규제비용의 선진국과의 비교, 2015.3
- Isabell Koske/OECD, The OECD's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 Policy Insights for OECD and Non OECD Countries, 2014.6
- W. Mark Crain/Washington: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 Report for the Office of Advocacy, 2005.12